

별첨

'22년도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운영계획

2021. 12. 31.

금융위원회

순 서

I. 추진 경과	1
II. '21년도 운영현황 및 평가	2
III. '22년도 뉴딜펀드 운영방향	5
IV. 향후 일정	10
[참고1]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구조	11
[참고2] 「뉴딜투자 공동기준」 개편 주요내용	12
[참고3] 정책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흐름도	13

I. 추진 경과

◇ '20.9월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조성방안 발표 이후 예산확보, 운용사 선정 등 펀드조성 및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추진 중

① (방안발표) ①한국판 뉴딜의 성공, ②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활용, ③국민과 성과공유를 위해 뉴딜펀드 조성방안* 발표('20.9.3)

* 「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」(관계부처 합동)

○ '21년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예산 5,100억원 확정('20.12.3)

○ 뉴딜펀드의 투자기준인 「뉴딜투자 공동기준*」 제정('20.12.4)

* 혁신성장 공동기준('17~)을 토대로 40개 뉴딜분야, 200개 예시품목 제시

○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·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* 마련('20.12.23)

* 「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」(관계부처 합동)

② (운용사 선정) ①모펀드를 운용하는 주관기관으로 산은·성장금융을 선정하고, ②자펀드를 운용하는 민간 운용사 52개사 선정('21.2·6월)

○ 1호 자펀드 결성(2.17) 및 투자집행(2.26)을 시작으로, 결성된 펀드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집행 진행 중*

* '21년중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결성액 5.6조원, 투자액 4,856억원

③ (국민참여) 2차례 걸쳐 2,500억원 규모의 「국민참여 뉴딜펀드」 조성*

* (1차, 3.29일 출시) 국민자금(1,419억원) + 재정(600억원) → 자펀드 결성(4.21, 2,019억원)
(2차, 11.29일 출시) 국민자금(269억원) + 재정(200억원) → 자펀드 결성(12.17, 469억원)

④ (예산확정) '22년도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정부예산 6,000억원* 확정(12.3)

* '21년도 뉴딜펀드 예산 5,100억원에 비해 900억원 증액

II. '21년도 운영현황 및 평가

1 운영현황

◇ '21년중 재정·정책자금을 마중물로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5.6조원을 결성하여 디지털·그린분야에 집중 투자 중

□ (결성현황) '21년중 5.6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당초 목표 결성금액인 4조원을 초과하여 펀드 결성

○ 재정 5,100억원, 산은 6,000억원, 성장사다리펀드 2,000억원 정책자금 등으로 민간자금(4.5조원)*을 매칭하여 5.6조원 결성

* 당초 민간자금을 2.69조원 모집할 계획이었으나, 1.8조원 초과 모집

○ 기업투자 펀드 41개 4.8조원, 인프라투자 펀드 3개 0.6조원*, 프로젝트펀드 6개 0.2조원 결성 완료

* 기업투자 및 인프라투자 펀드는 블라인드펀드에 해당

□ (투자현황) 102개 중소·중견기업에 4,856억원 투자중이며, '21년은 펀드결성 첫 해로 '22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

< '21년 결성펀드(5.6조원) 연도별 누적 투자계획(안) >

(단위: 조원)

구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~'26년
투자계획(누적)	0.5(9%)	2.3(40%)	4.0(70%)	5.1(90%)	5.6(100%)

○ 결성이 완료된 '국민참여 뉴딜펀드'와 '프로젝트펀드'* 위주로 투자되었으며, '블라인드펀드**'(기업·인프라)는 결성 후 순차 투자

* 프로젝트(기술인수, 전략적M&A 등) 우선정 후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하는 펀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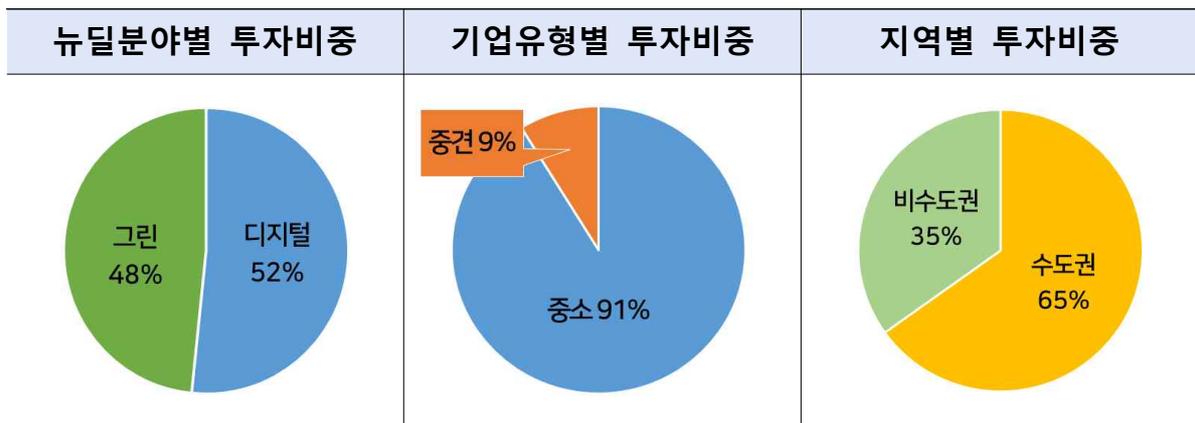
** 자금 先모집 후 다수의 뉴딜분야 기업 및 인프라에 선별 투자하는 펀드

- 「뉴딜투자 공동기준」에 따라 디지털·그린분야*의 중소·중견 기업에 투자**되고 있으며, 비수도권 투자(35%)도 상당한 수준

* 디지털뉴딜 31개 분야 115개 품목(예: 빅데이터, 첨단의료기기), 그린뉴딜 17개 분야 85개 품목(예: 전기차, 폐자원에너지) → 중복분야 8개 제외시 40개 분야

** 뉴딜분야 기업과 뉴딜관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분투자, 메자닌 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 넓게 허용

< '21년도 뉴딜펀드 분야별 투자비중 >



- (지원체계) 산은·성장금융(주관기관), 자펀드 운용사, 금융위·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뉴딜펀드 결성·투자 지원

- 산은·성장금융은 母펀드를 운용하는 주관기관으로 자펀드 운용사 선정·관리 및 재정·정책자금을 자펀드에 출자

- 자펀드 운용사는 주기적으로 운용현황·전략을 공개(금융위 유튜브)하고 있으며, 펀드 투자현황에 대한 정보도 공개 예정

- 뉴딜분야의 유망기업·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①관계부처별, ②유관협회별 투자설명회도 개최 중

* (관계부처) 금융위, 기재부, 산업부, 행안부 등 공동으로 총 7회 개최('20.11~'21.3월)
(유관협회) 운용사와 협회가 모집한 뉴딜분야 기업간 설명회 총 15회 개최(7~12월)

◇ '21년중 뉴딜펀드 운용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, 「국민 참여 뉴딜펀드」를 조성하여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

1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운용을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

- '21년(5,100억원)과 '22년(6,000억원) 뉴딜펀드 예산을 확보하여 '25년까지 20조원 펀드조성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·신뢰성 확보
- 「뉴딜투자 공동기준」을 마련해 다른 정책펀드와 차별화하고, 정책출자비율 차등화(30~60%)를 통해 다양한 펀드결성 유도

2 「정책형 뉴딜펀드」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투자수요 확인

- 당초 목표보다 민간자금을 많이 모집함에 따라 디지털·그린 분야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과 충분한 투자수요 확인
- 「국민참여 뉴딜펀드」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'뉴딜펀드'의 취지 달성

3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유도

-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탄소중립, 지역뉴딜 등 다양한 뉴딜분야에 모험자본이 공급되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

4 뉴딜펀드 운용과정에서 민간참여와 성과관리 강화 필요

- 산은·성장금융만이 재정 母펀드를 운용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·창의성 활용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
- 아울러, 자펀드 운용사의 투자 자율성은 확보하되 투자집행률 제고, 투자현황 공개·점검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

Ⅲ. '22년도 뉴딜펀드 운영방향

- ◇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바탕으로 민간참여 확대, 정책 수요 반영,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'22년중 4조원 결성 추진

1 기본방향

- ◇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운영에 민간참여로 경쟁과 창의성 제고
- ◇ 탄소중립, 지역뉴딜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뉴딜펀드 조성의 정책적 목적 달성
- ◇ 결성된 펀드의 신속한 투자집행을 유도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디지털·그린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
- ◇ 주관기관 및 운용사의 성과관리 강화로 펀드운영의 책임성 제고

'22년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운영방향

기본원칙	세부 운영방안
1. 민간참여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뉴딜펀드 주관기관(母펀드 운용) 공모 선정 ■ 우수 운용사 우대로 운용의 효율성 강화
2. 정책수요의 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탄소중립 및 지역뉴딜 지원 확대 ■ 「뉴딜투자 공동기준」 개편
3. 신속한 결성·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결성시한 단축 등 신속한 펀드결성 유도 ■ 투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투자 촉진
4. 펀드운영의 책임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■ 시장과의 소통 강화

'22년 4조원, 5년간('21~25년) 총 20조원 뉴딜펀드 조성

1. 뉴딜펀드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·창의성 제고

- (주관기관) 산은·성장금융 외에 민간 금융사를 추가 선정
 - 민간 운용사를 1분기중(3월중, 잠정) 공모로 선정하여 재정
모펀드(6,000억원)를 산은, 성장금융과 나누어서 운용
 -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분야를 분담하되, 민간
운용사는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의 펀드 주관*
- * 뉴딜펀드 주관기관은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운용현황 관리·점검 등 수행

< 기관별 뉴딜펀드 주관분야(안) >

- ▶ (산업은행) 중대형 펀드에 대한 출자경험, 다수의 지역점포 기반 등을 감안하여 중·대형펀드, 지역뉴딜 펀드 주관
- ▶ (성장금융) 기관 설립취지와 소규모, 프로젝트펀드의 출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형펀드, 프로젝트펀드, 국민참여 뉴딜펀드 주관
- ▶ (민간운용사) 투자분야를 특정하지 않는 기업투자 및 인프라펀드 주관

- (출자구성) 재정·정책자금 1.4조원(35%)과 민간자금 2.6조원(65%)을 매칭하여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[\[참고\]](#)
 - 산은과 성장금융의 뉴딜펀드 운용을 민간 운용사로 분산하여 민간 운용사(주관기관)가 뉴딜펀드(자펀드)의 일정부분 주관

< 재정 모펀드 및 자펀드 자원배분(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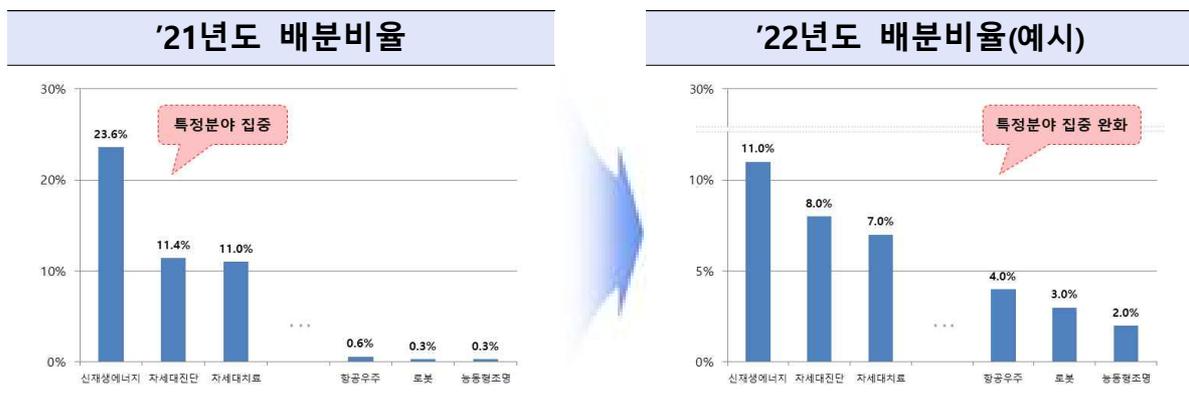


- (펀드운용) 우수 운용사 우대로 성과기반의 효율적 펀드운용 추진
 - 펀드당 결성규모를 '21년 740억원 수준에서 '22년 1,2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운용사 수는 52개에서 30여개로 조정
 - 향후 펀드 운용성과가 우수한 상위 운용사에 뉴딜펀드 운용 자금을 확대 배분토록 하여 성과에 기반한 펀드운용 추진*
- *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하위 운용사는 정책펀드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운용사별 펀드규모 대형화를 점진적으로 유도

2. 정책적 수요와 시장의견을 반영한 펀드 조성

- (결성분야)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탄소중립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뉴딜 등 정책적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
 - 탄소중립 분야* 펀드 운용사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
 - * 「뉴딜투자 공동기준」을 개정하여 녹색분류체계를 그린뉴딜 분야에 반영 [\[참고2\]](#)
 - 지역투자를 위한 펀드 지원분야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*
 - * '21년 결성목표 500억원 → '22년 결성목표 1,200억원으로 규모 확대(잠정)
 - 40개 뉴딜분야 중 특정 분야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뉴딜분야별 펀드자금 배분 유도

< 뉴딜분야별 펀드자금 배분안(예시) >



- (조성시기) 시장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여 2차례에 걸쳐 조성하며, 1차(1분기~)는 2.8조원, 2차(2분기~)는 1.2조원* 규모로 조성
 - * 「국민참여 뉴딜펀드」는 '21.11월에 출시된 점을 감안해 '22.3분기중 출시 검토

3. 신속한 펀드결성 및 투자촉진 유도

- (펀드결성) '22년 상반기중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조기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4조원 규모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
 - 1차 운용사 모집은 '22년초에 공고하고 2차 운용사 모집은 4월중 공고하여 '22년 상반기중 위탁운용사 선정 예정*
 - * 펀드 결성시한은 '21년 대비 1개월 단축(예: '21년 1차 8개월 → '22년 1차 7개월)
 - 운용사 선정 후 일정기간 내 펀드 조기결성 시 인센티브 부여*
 - * 예) 향후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
 - 잠재적 출자자, 투자기업이 펀드현황, 투자대상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 홈페이지* 내실화
 - * (뉴딜펀드 홈페이지 주소) <http://fund.knewdeal.go.kr>
- (투자촉진) 결성된 펀드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투자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설명회도 지속 개최
 - 펀드결성 초기에도 운용사가 투자에 대한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잔액과 미투자잔액을 구분하여 운용보수 차등화*
 - * 결성후 2년간 보수 : (現) 약정총액 × 보수율 → (改) 미투자잔액에 대해 보수율 하향조정
 - '22년내 일정비율 이상 투자(예: 10%)시 인센티브 부여*
 - * 예) 향후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
 - 투자집행이 부진하거나 뉴딜분야 투자 의무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향후 출자제한, 보수삭감 등 조치
 - 디지털·그린분야의 유망한 혁신기업 발굴을 위해 월 1회 이상 운용사-뉴딜기업간 '뉴딜펀드 투자설명회(IR)*' 개최
 - * 디지털·그린분야의 중소·중견기업, 뉴딜 관계부처, 유관협회 등 참여

4. 뉴딜펀드 운용사 성과관리 및 소통 강화

- (주관기관 관리) 산은, 성장금융, 민간 운용사에 대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취지에 맞는 운영여부를 점검·관리

< 주관기관 관리·감독방안(예시) >

- ①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'정책펀드 성과관리위원회'를 설치하여 뉴딜펀드 주관기관 및 자펀드 운용사 평가·관리
- ② 뉴딜펀드 주관기관(산은·성장·민간)에 대해 신용평가사,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뉴딜펀드 운영·관리실적에 따른 성과평가* 추진**(23년초)
* 뉴딜펀드 성과평가지표 개발(연구용역 진행중) → 외부 전문기관이 활용 예정
**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(예: 주관분야 조정)
- ③ 금융위와 주관기관간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(1)위탁운용사 관리현황 및 (2)주관기관 운영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·모니터링

- (운용사 관리) '22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, 위탁운용사의 펀드 운용단계별로 점검·평가를 대폭 강화

< 운용사 관리·감독방안(예시) >

- ① (운용사선정) 위탁운용사, 운용인력 등에 대한 과거 실적, 운용계획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여 경쟁력 있는 운용사 선정
- ② (펀드운용) 주관기관이 분기별로 운용사의 법규·규약 준수여부*, 펀드 운용현황** 등을 확인·점검하고 '정책펀드 성과관리위원회'에 보고
* 법령위반 등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향후 정책펀드 참여시 페널티 부여
** 주목적 투자현황, 운용사 주요 변동사항, 포트폴리오 주요 변동사항(예: 부실발생) 등
- ③ (성과평가) 뉴딜펀드 결성·투자실적 등 자펀드 운용사별 운용현황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가 낮은 운용사에 대해 출자제한 등 제재 부여*
* 예) 최종 평가결과 하위 운용사는 일정기간(예: 3년간) 정책펀드 참여제한

- (소통강화) 운용사 정기 간담회, 운용전략·현황 공개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의 투명성·신뢰성 제고

< 펀드운용의 투명성·신뢰성 제고방안(예시) >

- ① (운용사 소통) 주관기관, 위탁운용사, 출자자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펀드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
- ② (운용현황 공개) 뉴딜펀드의 투자·운용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공개하고, 위탁 운용사별 투자·운용전략 등을 정기적으로 소개(예: 금융위 유튜브)

IV. 향후 일정

◇ '22년중 뉴딜펀드 4조원 결성을 목표로, ①운용사 선정, ②국민 참여 뉴딜펀드 출시, ③운용현황 점검 등을 차질없이 준비

세부 추진과제	추진일정	수행기관
①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결성		
▶ 운용사 1차 모집공고	'22.1월초	산은·성장
▶ 뉴딜펀드 주관기관(민간운용사) 모집공고	'22.1월중	산은
▶ 운용사 1차 선정	3월초	산은·성장
▶ 뉴딜펀드 주관기관(민간운용사) 선정	3월중	산은
▶ 운용사 2차 모집공고	4월중	산은·성장· 민간운용사
▶ 운용사 2차 선정	6월중	
▶ 자펀드 결성(4조원) * 결성된 펀드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집행	연내	자펀드 운용사
② 「국민참여 뉴딜펀드」 출시·결성		
▶ 공모펀드 운용사 모집공고	'22.1월중	성장금융
▶ 공모펀드 운용사 선정	3월중	
▶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	2/4분기	
▶ 자펀드 운용사 선정	3/4분기	
▶ 펀드상품 출시	3/4분기	판매사
▶ 국민참여 뉴딜펀드 결성	10월중	운용사
③ 뉴딜펀드 투자촉진 및 성과관리		
▶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	매월(원칙)	산은·성장· 민간운용사
▶ 뉴딜펀드 투자·운용현황 점검	매월(원칙)	
▶ 뉴딜펀드 주관기관 및 운용사 성과평가	'23년초 이후	
▶ 뉴딜펀드 주관기관 및 운용사 간담회	매월(원칙)	금융위
▶ 정책펀드 성과관리위원회 개최	매반기 (필요시 수시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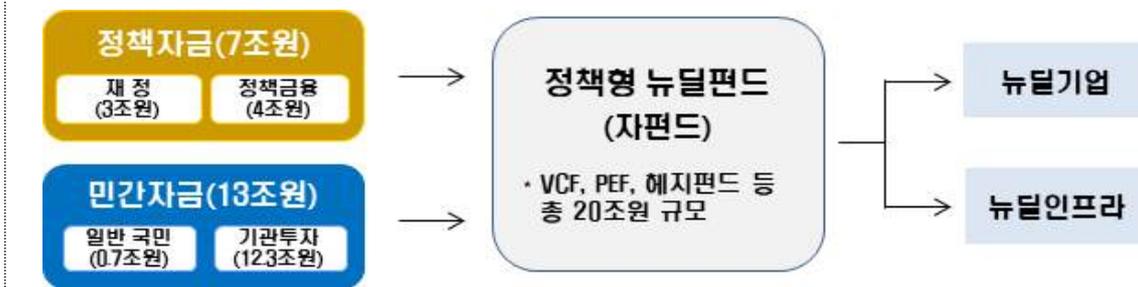
참고1

「정책형 뉴딜펀드」 구조

◇ 정책자금(7조원)을 마중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한편,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통해 국민과 성과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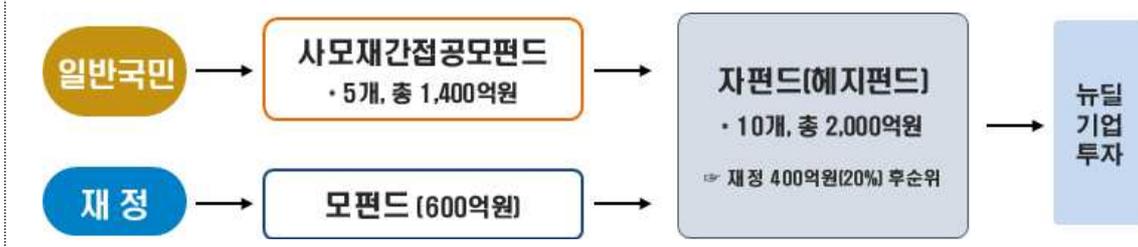
- '21년부터 '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, 연 4조원 규모 펀드조성
 - 5년간 재정(재정 母펀드) 3조원, 산은 3조원,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(정책자금 7조원), 민간자금 13조원으로 재원 구성
 - 매년 재정 6천억원, 산은 6천억원, 성장사다리펀드 2천억원(정책자금 1.4조원), 민간자금 2.6조원으로 4조원 결성 계획

※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기본구조(예시)



- 정책형 뉴딜펀드 중 「국민참여 뉴딜펀드」는 매년 2천억원 조성
 - ①펀드에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하여 모집된 자금(‘사모재간접 공모펀드’)과 ②정부재정을 함께 출자하여 조성
 -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은 자펀드에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(펀드자산의 20%)되어 위험을 우선분담

※ 「국민참여 뉴딜펀드」 기본구조(예시)



1. 추진배경

- ①녹색분류체계(12.30일 발표), ②뉴딜 최신동향, ③뉴딜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「뉴딜투자 공동기준」 개편*

* '혁신성장정책금융 실무협의회' 의결 등을 거쳐 '22.1월부터 시행

2. 주요내용

- ① (녹색분류체계 반영) 그린뉴딜을 ①녹색분류체계 관련 그린과 ②기타그린으로 구분하고, 관련품목 신규 반영(6개)*

* ①녹색분류체계 관련 그린 5개 품목 추가(무탄소 가스발전, 리튬메탈배터리 등)
 ②기타그린 1개 품목 추가(핵산기반 백신 및 치료제)

- ② (최신동향 반영) 디지털분야 혁신 신기술 등 관련품목 추가(6개)*

* 메타버스, 초소형 위성용 통신기술, 예측분석 디지털 프로그램 등 6개 품목

- ③ (일부품목 조정)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「뉴딜투자 공동기준」 품목의 병합·삭제 및 명칭변경 등 조정*

* 조정을 통해 개편 후에도 종전 40개 뉴딜분야, 200개 품목 체계 유지

< 「뉴딜투자 공동기준」 품목 변동내역 >

현행 품목 (A)	품목 변동내역(B)				개편안 (A+B)
	신규(a)	병합(b)	제외(c)	계(a+b+c)	
200개	12개	△9개(17→8)	△3개	-	200개

3. 향후일정

- '22.1월부터 「뉴딜투자 공동기준」 개편안 시행*

* 「2022년 혁신성장·뉴딜투자 공동기준」 통합 매뉴얼 발간 예정('22.1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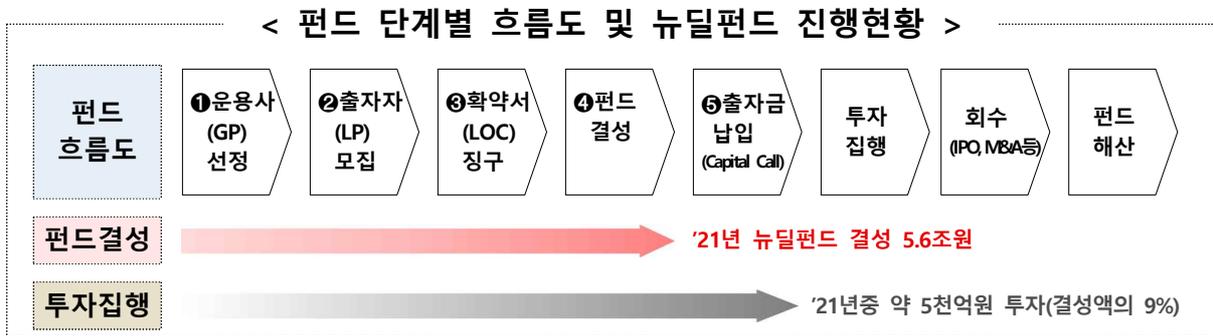
- '22년중 ①녹색분류체계 논의사항, ②뉴딜 최신동향, ③뉴딜 관계부처 의견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보완 추진('22년말)

1. 펀드결성

□ 정책펀드는 ①선정된 운용사(GP)가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②민간 출자자(LP)의 ③출자확약*을 거쳐 출자자금 확보시 ④최종 결성

* 출자확약서(Letter of Commitment)는 출자액을 사전에 정하고 펀드결성 참여를 약속하는 사적 계약으로,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불이행시 강제이행·손해배상 등 가능

○ 펀드 결성시에는 펀드규약에 출자자별 출자 예정액을 기재 하고, 투자시점에 앞서 ⑤운용사가 출자자에 자금납입을 요청 하는 방식(Capital Call)으로 자금의 실제 출자가 이루어짐



2. 투자집행

□ 통상적으로 펀드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운용사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 펀드의 정해진 투자기간(뉴딜펀드는 5년) 내에 단계적·순차적으로 투자*가 진행됨

* 펀드결성 첫 해의 경우 대체로 결성액의 5~10%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짐

< (예) 「성장지원펀드」 연도별 투자금액·비중 >

(단위: 억원)

결성 연도	결성 금액	투자액*				누적액
		'18년	'19년	'20년	'21.11월말	
'18년	29,351	1,121(4%)	11,087(38%)	9,192(31%)	4,667(16%)	26,067(89%)
'19년	32,034	-	1,514(5%)	7,272(23%)	12,492(39%)	21,278(67%)
'20년	37,649	-	-	3,736(10%)	11,573(31%)	15,309(41%)

* 성장지원펀드의 투자기간은 4~5년